

대륙붕 경계확정문제의 중국 국제법적 활용분석

- 황펑란(黄鹏岚)¹⁾

개요 : 이 글은 국제법 이론을 이용하여 대륙붕 경계확정 문제를 알기 쉽게 분석하였고 ‘해양경계확정’과 ‘영토주권’의 구별과 연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대륙붕 경계확정에서의 국제법적 활용은 자연연장과 형평 원칙, 중간선 원칙, 비례 원칙 등을 다루며 우리나라(중국)가 어떻게 협약에 대해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장하고 공동개발을 통한 과도기적 방식과 사법적 경로를 통해 대륙붕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 언

1. 해양경계확정과 도서지역 영토 주권

해양경계확정과 도서지역 영토주권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서의 영토 주권 → 기점설정(확정 가능한 일부 도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경계확정의 참고대상으로 삼는다.) →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경계확정 → 복잡성 고려(해역면적이 좁다면 각국은 ‘협약’에 규정된 다른 경계확정 규칙을 적용한다.) → 이웃 국가 경계와 중복 → 경계확정분쟁 발생

따라서 해양경계확정 문제와 도서지역 영토주권 문제는 국제법규를 정확히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각국 해양경계확정의 기초 중 하나이다.

2. 대륙붕

대륙붕의 개념은 1945년 9월 트루먼 선언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질학적인 대륙붕 개념은 새로운 법률개념이 되었고 일련의 법률제도가 나오게 되어 대륙붕 법률제도의 초석을 놓았다. 1958년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 회의에서 각국은 대륙붕 협약을 각각 비준하였고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은 대륙붕 법률제도를 한 단계 더

1) 서북 정법대학 교수.

완성된 형태의 모습으로 다듬었고 현대 국제해양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자 권위 있는 ‘해양 헌법’이 되었다.

대륙붕 경계확정

1. 분쟁의 형성

1982년 ‘협약’ 제76조 대륙붕 관련 규정에는 대륙붕은 연해국 영토가 해양으로 자연적으로 연장이 된 경우 주권을 가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안국의 그에 대한 주권 권리는 고유한 것이 된다. 중국은 1998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반포하였다. 제2조의 대륙붕과 관련된 규정은 1982년 ‘협약’에 근거한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리적 조건의 제약과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 ‘협약’에 따라 가장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범위”²⁾를 주장하였고 중국과 인접국가간의 해역 주장도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었다.

2. 외대륙붕 권리 신청

외대륙붕은 ‘협약’ 제82조에 연해국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200해리 밖의 대륙붕에서부터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해국이 대륙붕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경우 협약이 발효 10년 내에 대륙붕의 외부 경계를 정하는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외대륙붕 권리 신청’이라고 한다. 대륙붕의 개발 수익은 연해국별로 각자 소유하고 자유롭게 배분하는 대륙붕과 달리 외대륙붕의 수익 배분 방식은 해양이 연해국뿐만 아니라 내륙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해 대외 대륙붕에 ‘무생물자원 개발’을 비용이나 현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생물자원’이란 각국이 원하는 가스 등 심해 광물자원을 말한다. 각 연해국은 대륙붕의 심해 자원확보에 공을 들일 뿐만 아니라 외대륙붕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때문에 공약을 활용하여 해양권익을 설정하려 한다.

대륙붕 경계확정과정에서의 국제법 활용

2) 위민차이(余民才). 중국과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J]. 현대 국가관계, 2012(10) : 57.

1. 경계확정방법의 활용

① 자연적 연장과 형평원칙

중국이 대륙붕 경계확정의 과정에서 자연적 연장과 형평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1982년 ‘협약’ 제76조 1항에는 “연해국의 대륙붕은 영해 외에 대륙 영토에 근거한 완전한 자연적 연장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대륙붕 외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자연적 연장의 기초하여 대륙사면 등 지리·지형적인 상황에 따라 최대의 대륙붕 경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이 자연연장 원칙으로 얻는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는 고유한 것이 된다. 대륙붕의 경계 확정은 협약 제83조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해양경계확정의 공평한 해결”이 근본 목표이거나 형평원칙이 “형평성 있는(공평) 결과를 얻기 위한 확정 규칙”이라고 언급하였다. ‘형평’은 이른바 ‘등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 특수한 상황을 결합해 나온 것을 말한다.

② 중간선 원칙

중간선이라는 개념은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시작되었는데 제6조 1항의 해안을 마주 보고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륙붕경계는 당사국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만일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특수사정이 대륙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만 중간선이라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륙붕 협약이 ‘중간선 원칙’에 일반 국제법 원칙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제약조건이 많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협의

협약 제83조 1항에는 ‘해안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국가 혹은 인접 국가 간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제38조에 명시된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륙붕 경계확정에서는 분쟁국이 우선 ‘합의’를 통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대륙붕 문제는 당사국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당사국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고수하며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④ 기타 규정

비례 원칙³⁾ : 당사국간에 인접한 해역의 관련 해안선의 길이와 당사국이 해양경계획정의 방식을 통해 얻은 관련 해역의 관계는 수학적인 비례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판례에서 경계획정의 불공정성은 현저히 비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례 원칙 자체가 독립적인 획정 규칙이 아닌 보조적 판단 기준이다. 특수한 상황 및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즉 지리적 요인, 실제 사례에서 제3국의 이익도 응당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2. 섬 경계획정의 효력

1982년 협약 제121조는 섬에 대해 사면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보다 높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 동 조항 2항은 또 3항의 별도 규정 외에 섬의 영해, 인접 지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은 본 협약에 따라 다른 육지의 영토 규정에 적용되어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인간이 살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섬은 대륙붕 경계에서 흔히 ‘경계획정 기준’이 된다. 이 외에도 해양경계획정 당사국의 동의도 중요한 기준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주권 분쟁중인 섬은 해양경계획정에서 효력이 없고 그 섬을 경계획정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⁴⁾.

결 론

1. 전면적인 활동 전개

중국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륙붕 경계획정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 외교 협상에서 더 많은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또 중국은 해저자원 탐사, 채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자국의 해양 권익을 실현해야 한다⁵⁾. “중국은 모든 분쟁은 자발적인 토대 위에서 관련국들이 합의나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대륙붕 경계 문제

3) 마슈에즈(冯学智). 중국 해양권익분쟁의 국가법 분석 [M]. 중국정법대학출판사, 2013, 3: 18.

4) 왕이관. 섬이 해양경계획정에서 가지는 효력 분석 [J]. 법제와사회, 2013. 3(上).

5) 장하이원(张海文).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과 중국 [M]. 북경 오조우전보(五洲传播) 출판사, 2014, 10: 25.

를 공식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강제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은 소송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세워진 대륙붕 경계 문제의 현실적 복잡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사법적으로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종 방식이어야 한다.

2. 공동 해양자원 개발

얼마동안 분쟁은 논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해당 섬에 대한 주권을 표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다. 경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 공동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대륙붕 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대륙붕 자원의 개발 활용이고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1982년 협약 제83조의 규정도 분쟁국들이 양해와 협력 정신에 기초한 ‘과도기적 합의’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국제법적 요구에 따라 분쟁을 잠시 논하지 않으면서 분쟁지역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대륙붕 경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